

# 인구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분묘관리의 전망과 대응

## - 베이비부머이후 미래세대가 당면할 분묘관리의 곤란성과 해결방안 -

*Prospect of Cemetery Management in Times of Rapid Population and Socioeconomic Changes*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개인묘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 매장문화에 있어 초저출산현상, 남아선호사상의 퇴조, 인구의 도시이동, 친족관계 결속력 약화 등으로 인해 미래세대에 의한 분묘의 관리는 개별가계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묘지관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가계내 남아출생아수의 변화를 누적적으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주변세대 3.00명, 자녀세대 0.85명, 손자녀세대 0.54명, 증손자녀세대 0.34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달리 말하면, 자녀세대의 15%, 손자녀세대의 46%, 증손자녀세대의 64%의 가계가 남자자손이 단절됨으로써 묘지관리가 불가능한 가계가 동비율만큼 급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내 남아출생아수를 합산한 친족가계전체 남아출생아수는 자녀세대 2.54명, 손자녀세대 1.61명, 증손자녀세대 1.02명으로 급격히 줄어들어서, 친족가계내에서 각 세대별로 관리해야 할 분묘수가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는 0.67기에 불과하지만, 자녀세대 3.15기, 손자녀세대 8.11기, 증손자녀세대 15.92기 등으로 폭증하게 된다. 여기에는 베이비부모 주변세대의 조부모세대 이상 조상분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개별가계내에서의 분묘관리의 곤란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관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적극적 홍보교육을 통하여 관리 불가능성에 직면하기 이전에 가계내에서 자체적인 분묘처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함과 아울러, 기존묘지를 자연장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1. 서론

200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50%를 넘어서면서 매장 위주에서 화장 위주로 장사관행의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35% 가까이 매장을 선택함으로써 매장문화는 여전히 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가계별로 차별화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집단묘지가 주류를 이루는 유럽, 영미권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개인묘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동양적 유교사상에 풍수설이

결합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다. 고려말 유교의 전래에 따른 매장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풍수설의 확산에 따라 보다 나은 장소에 가족의 시신을 매장하고자 하는 보편적인 열망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신분제의 영향으로 사회계급상 중하류층은 공동묘지를 이용하고 극소수에 불과한 상류층 이상만 개인묘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묘지의 확산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일제시대 들어 개인묘지의 확산을 가로막던 신분제가 폐지되고 해방이후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 재분배로 개인별 매장공간이 어느정도 확보됨에 따라

개인묘지의 확산은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묘교사상과 풍수설의 결합은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그 결과 산야 곳곳에 묘지가 들어서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를 관리하는데에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른다. 주기적인 별초가 행해지지 않고 몇 해만 방치하면 우거진 수풀이나 잡목때문에 묘지의 구분이 어려워진다. 현시점에 설치되는 분묘는 운구인력의 부족, 장지의 접근성 고려 때문에 저지대로 내려오고 있으나, 과거에 설치된 분묘는 주로 임야의 7부능선 위쪽 등 고지대에 주로 설치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곳은 인적이 끊겨 잡목이나 수풀이 우거지는 경우가 많아 길을 만들어가며 별초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낮이나 예초기의 날에 상처를 입거나, 벌, 뱀, 멧돼지 등 곤충이나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까지 수반된다. 과거 낮으로 별초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예초기의 등장으로 분묘관리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많이 줄기는 했으나, 분묘가 여러 곳에 산재하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적정 노동력의 투입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998년 당시 서울대에서 추정된 분묘수는 약 2000여만기이며, 그 이후에도 매년 10만기 가까운 신규분묘가 계속 설치되고 있다. 개인묘지가 주류를 이루는 우리나라에서 분묘의 관리주체는 개별 가계이다. 그런데 초저출산현상, 남아선호사상의 퇴조, 인구의 도시밀집현상의 지속,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결속력 약화 등 개별가계를 둘러싼 제반 환경변화는 장사문화의 변천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묘지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인구급증기에 태어난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주변세대가 주된 분묘관리인력이므로 분묘관리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인구급감기에 태어나거나 태어날 예정인 이들의 자녀, 손자녀 세대는 조상들의 묘지관리에 있어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무연분묘 급증이나 묘지관리대행 회사의 등장에서 미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고는 인구·사회·가족 환경 변화에 따라 묘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일반가계내에서의 직면하게 되는 묘지관리의 곤란정도와 해결방안에 관해서 논의해 보기로 한다.

## 2. 분묘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저출산 현상

저출산은 향후 조상의 묘지를 관리할 실질적인 인력의 감소를 불러온다. 한 여성이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은 잠재적인 묘지관리인력의 감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의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인 이후 해마다 급속히 떨어져, 1983년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2.08명을 기록하였다. 특히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 역사적 최저치인 1.08명을 기록하였다. 5년주기의 평균 합계출산율로 살펴볼 경우 <표 1>과 같이 1960년대 6.0명, 1970년

표 1. 5년주기 평균합계출산율

(단위: 명)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합계출산율	6.0	5.63	4.01	2.84	2.14	1.60	1.72	1.51	1.26	1.13	1.16	1.18	1.22	1.26

주: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에 낳는 평균출생아수로서 표의 수치는 5년간 연평균 수치임(예, 2000년 수치는 2000~2005년의 연평균 수치).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대 4.01명, 1980년대 2.14명으로 10년 주기별로 약 2명씩 급감하였고, 1990년대를 전후하여 1명대의 저출산에 머물고 있다.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실제 출생아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주민등록 인구의 연령별 변화(5세 간격)를 살펴보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세 미만의 남자인구가 모든 연령대에서 급격한 하락추세를 이어감을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구수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전체 남자인구에 대한 0~29세 남자인구의 구성비가 1960년 70.6%에서 2010년 38.7%로 절반수준 감소하였고, 2030년에 이르면 21.6%에 불과하여 3분의2 수준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소추세는 진정되지 않고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장래 인구구조를 결정하는 만 0~4세아의 변화추이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1960년 238만명을 기록한 이래 급격한 하락을 지속하여 2010년 114만명(47.8%), 2050년 59만명(25.0%)에 그칠 전망이다. 0~4세 출생아의 급감추세는 각세별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내 묘지관리인력 수급의 차질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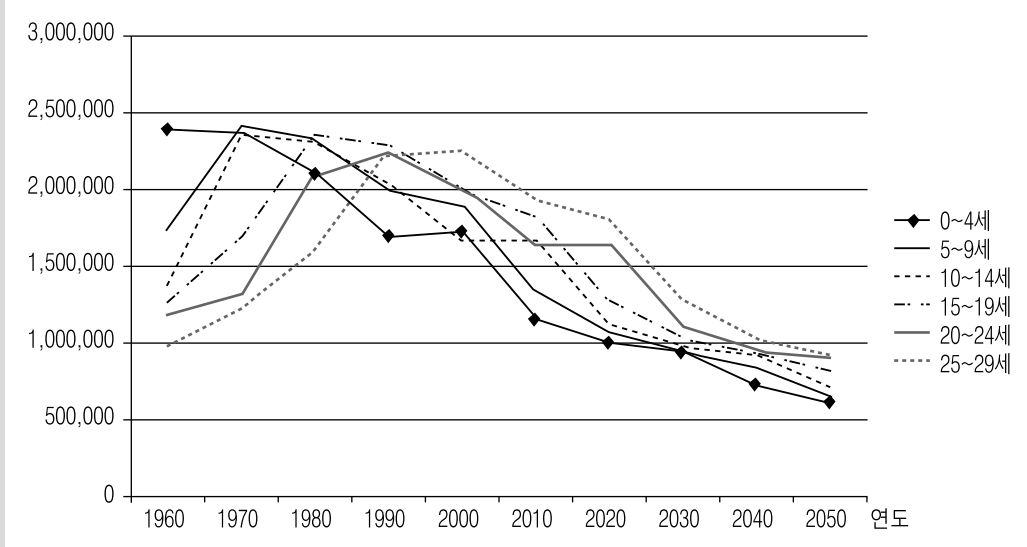
## 2) 남아선호 퇴조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존재하던 남아선호사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남아선호사상은 농경시대 노동력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가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즉, 대를 잇는다는 개념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1960~1980년까지 105~107명에 머무르던 0~4세아의 남녀성비가 1995년 113.4명까지 올라가다가 2005년 들어 108.06명으로 하락하여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앞서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1990~2000년의 합계출산율은 1.72명에서 1.26명으로 0.46명의 급격한 하락세를 겪은 시기로서 남아선호가 지속되었다면 출산율 하락에 따른 반대급부로 남아선호출산의 선택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남녀성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5.37명포인트인 약간의 상승에 그쳤다.

가계내에 출생아수가 급감할 경우 대를 잇기 위해서는 선별출산(물론 불법행위이지만 암묵적으로 행해졌다)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선별출산이 급증하여야 하나, 미미한 정도에 그친 것은 기존에 잔존하고 있던 남아선호가 출생

그림 1. 주민등록인구 각세별 변화(1960~2050)

(단위: 명)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 전국 추계인구

아수 급감시기에 약간 반영되었다가 점차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남녀성비의 유의미한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전국평균보다 2.0명포인트 정도 아래의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정도가 모여살고 있으면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남아선호경향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도지역의 남아선호사상의 퇴조까지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 추세지속과 남아선호사상의 퇴조는 가계내 묘지관리인력의 지속적 충원을 어렵게 하고, 남자출생아가 단절되는 가계가 증가하는

경향을 불러온다.

### 3) 거주환경 변화(인구의 도시이동)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생활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도시화, 도시지역으로의 이동 등 거주환경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를 불러온다. 지역별로 문화는 달리 나타나며, 지역의 고유문화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가치관 형성기인 청소년기에 접하는 지역 문화는 가치관 형성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다.

지역별 장사문화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지역별 화장물을 들 수 있다. 2008

표 2. 0~4세아의 남녀성비(1960~2005년)

(단위: 명)

행정구역별	1960년	1965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전국	105.27	107.23	106.77	107.44	107.28	108.03	111.20	113.40	110.21	108.06
수도권	104.72	106.60	106.69	107.69	107.54	107.65	108.50	111.03	108.85	106.58
광역시(경기포함)	104.72	106.95	106.90	107.61	107.61	108.77	112.26	113.85	110.96	108.63
도(경기제외)	105.27	106.90	106.55	106.98	106.86	107.42	111.21	113.35	110.36	109.15

주: 성비는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주택총조사

년 시도별 화장률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8개 광역시 지역은 사망 141,231명, 화장 99,792명으로 화장률이 70.65%이고,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은 사망 104,882명, 화장 52,268명, 49.83%로 양 지역의 편차는 20.82%에 달한다. 또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사망 93,832명, 화장 67,089명으로 화장률은 71.49%로 나타나 경기포함 광역시 전체 화장률보다 높게 나타난다. 화장률이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장사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의 도시밀집에 따른 장사문화의 변화는 시계열 추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970~1980

년대 경제성장과 맞물린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맞물려 장사문화는 서서히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2000년대 들어 화장률이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70~80년대 10%대에 머물고 있던 화장률이 2000년대 초 40%대로, 2008년도에는 60%대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국가별 화장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문화권이면서 도시국가인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 화장률이 각각 86.13%, 85.83%, 77.55%이며, 이는 인구밀집에 따른 매장공간 부족이 장사문화 형성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라 추정할 수 있다.

표 3. 권역별 화장률(2008년)

(단위: 명, %)

권역별	사망자수	화장자수	화장률
전체	246,113	152,420	61.93
광역시(경기 포함)	141,231	99,792	70.65
도(경기 제외)	104,882	52,268	49.83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3,832	67,089	71.49

자료: 2008년 화장률 통계, 보건복지부, 2009. 12. 재가공

**표 4. 우리나라의 화장률 변화 추이(1970~2008년)**

(단위: %)

연도	1970	1981	1991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화장률	10.7	13.7	17.8	38.3	42.5	46.4	49.2	52.6	56.5	58.9	61.9	65.0

자료: 1) 2008년 화장률 통계, 보건복지부, 2009. 12.  
2) 2009년은 복지부 내부자료

**표 5. 세계 주요국가 화장률(2006년 기준)**

(단위: %)

국가	화장률	국가	화장률	국가	화장률	국가	화장률	국가	화장률
일본	99.73	스웨덴	73.23	네덜란드	53.68	독일	40.10	프랑스	26.26
홍콩	86.13	영국	72.38	중국	48.20	헝가리	36.25	아르헨티나	22.00
대만	85.83	슬로베니아	66.99	러시아	46.50	노르웨이	34.58	스페인	20.50
체코	79.84	뉴질랜드	66.33	룩셈부르크	43.68	핀란드	34.24	아이슬란드	18.41
싱가포르	77.55	스위스	64.11	벨기에	43.63	미국	33.53	라트비아	14.78
덴마크	74.32	이탈리아	9.64	포르투갈	40.61	오스트리아	26.43		

자료: 김달수, 장사법, 2008

0~29세 남자의 시, 도별 거주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경기를 제외한 도지역의 경우 1970년 56.6%이던 것이 2010년 28.8%를 거쳐 2030년 25.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시지역은 1970년 43.4%에서 2010년 71.2%를 거쳐 2030년 74.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과밀화를 겪고 있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경우 1970년 28.1%에서 2010년 50.2%, 2030년 56.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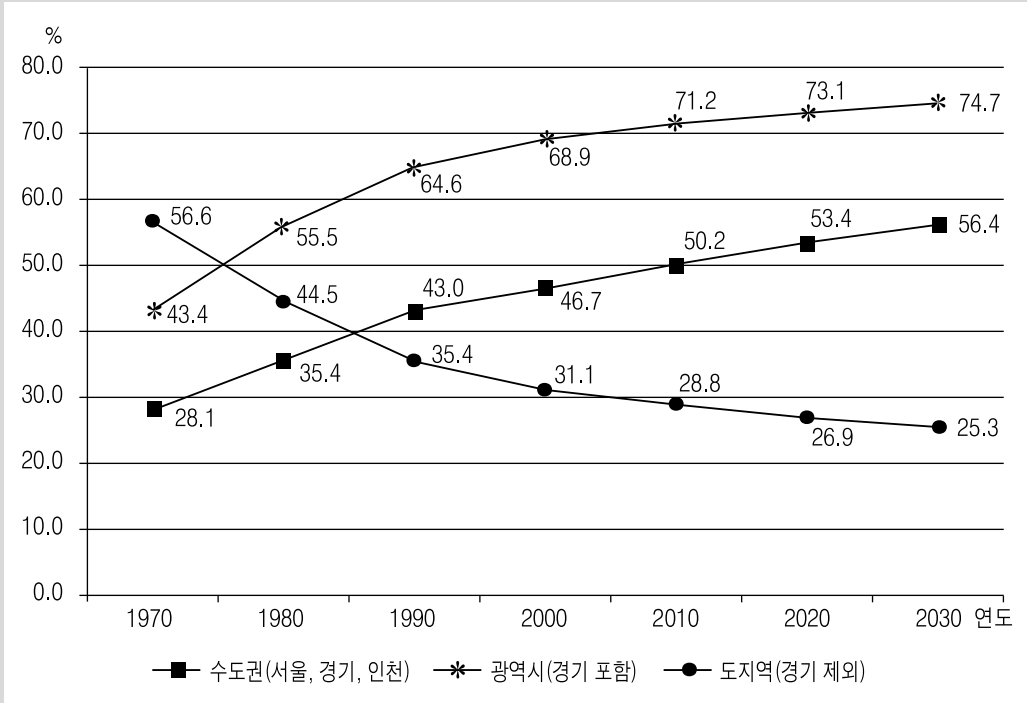
1970년대의 0~29세 남자의 56.6%가 농어촌인 도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하던 것이 2010년에는 71.2%가, 2030년에는 74.7%가 도시지역인 광역시지역에서 성장하고 생활하게 됨으로

써 1970년대의 청소년들과는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문화를 접하며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1970년대의 29세 이하 남자와 2010년대의 29세 이하 남자는 가족문화의 변화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거주환경의 격차로 인해 상당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은 친족관계의 단절 또는 약화 현상을 가져온다. 친족공동체의 친밀감과 유대관계는 접촉의 빈도가 늘어날수록 강화된다 할 것인데 타지로의 이동은 친족관계의 단절 또는 약화를 불러오게 된다.

전체인구의 순이동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에서의 인구유출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이탈한 인구는 수도권으로

그림 2. 0~29세 남자의 거주현황(1970~2030년)



주: 행정구역의 변경을 감안할 경우 수치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도농을 불문하고 생활환경이 급격히 개선되었다는 점과 교통의 발달과 언론매체에 힘입어 생활문화권이 도시로부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수치의 차이는 경미하다 볼 수 있을 것임.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시도) 추계인구

계속 유입되고 있다. 1977~2009년까지 수도권은 1,359천명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졌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동일한 인구수만큼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동기간동안 경기포함 광역시의 경우 746천명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졌으나, 경기제외 도지역의 경우 동일한 인구수만큼 인구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시대인 70~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아직도 여전히 수도권, 광역시 등 도시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이

러한 인구집중현상은 여러 도시국가와 우리나라의 화장률 증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장사문화의 급변을 불러오고 있다.

도농간 장법선택의 확연한 차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이한 생활환경은 상이한 문화를 낳게 되고, 이러한 환경과 문화는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필연적인 개인 가치관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도시로의 인구이동 등 거주환경변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장법선택의 변경을 가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 장례식장으로 장례장소의 변경을 가져왔

표 6. 인구 순이동 현황(1997~2009년)

(단위: 만명)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수도권	62	9	95	150	136	210	137	140	129	112	83	52	44	1,359
비수도권	-62	-9	-95	-150	-136	-210	-137	-140	-129	-112	-83	-52	-44	-1,359
광역시(경기포함)	24	-34	65	115	93	166	90	95	62	49	24	3	-6	746
도지역(경기제외)	-24	34	-65	-115	-93	-166	-90	-95	-62	-49	-24	-3	6	-746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이동통계

으며, 친족관계의 단절 또는 약화현상을 불러와 분묘관리를 관련회사나 타인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형태까지 등장하고 있다.

#### 4) 가족관계의 변화

##### (1) 초핵가족화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 농경시대의 산물인 대가족제에서 산업화시대에 동반한 인구이동으로 핵가족제로 변모하였고, 현재에 이르러 초핵가족화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제의 변화는 가구형태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데, 1980년에 5인 이상 >4인 >3인 >2인 >1인가구의 순이던 가구형태가 2005년에는 4인 >2인 >3인 >1인 >5인 이상 가구로 변화함으로써 5인 이상 가구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대가족 형태가 급격히 와해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1인, 2인가구는 급격한 증가추세임에 반해, 3인, 4인가구는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추세로 전환한 것은 사실상 핵가족마저 붕괴과정에 들어서고 있고, 보다 세분화된 한부모가구, 1인가구 등 초

핵가족의 등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추세와 기율기를 감안할 경우 머지않아 1980년의 가구형태와 정반대의 가구형태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설부터 가정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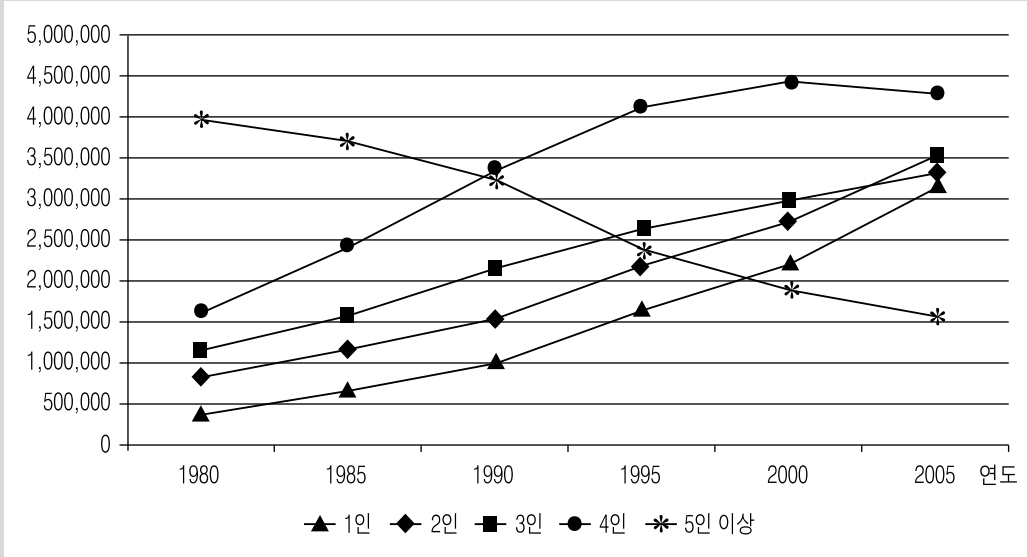
##### (2) 가족해체(이혼율의 증가)

혼인율은 감소하는데 비해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1980년 10.6명을 정점으로 2009년 6.2명까지 감소한데 비해, 조이혼율은 1970년 0.4명에서 2009년 2.5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배우자가 있는 인구 1천명 당 이혼건수인 유배우 이혼율은 1990년 2.4건에서 2008년 4.8건으로 2배로 증가했다. 가족형성이 감소하는 반면, 가족해체는 증가함으로써 기존의 가족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생긴다. 어떻게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할 경우 전통적 가족체계의 혼란을 가져오고 친족관계의 결속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친족간 묘지관리 이행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림 3. 가구형태 변화추이(1980~2005년)

(단위: 가구)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가구형태,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표 7.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1970~2009년)

(단위: 명, %)

기본항목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혼인건수(건)	295,137	283,226	403,031	384,686	399,312	398,484	332,090	314,304	309,759
조혼인율(천명당)	9.2	8.0	10.6	9.4	9.3	8.7	7.0	6.5	6.2
이혼건수(건)	11,615	16,453	23,662	38,187	45,694	68,279	119,455	128,035	123,999
조이혼율(천명당)	0.4	0.5	0.6	0.9	1.1	1.5	2.5	2.6	2.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추이

### 3. 인구 및 가계 구조의 변화에 따른 분묘관리 전망

#### 1) 묘지관리 수행인력(25~64세 남자)의 급감

개별가계 구성원내에서 묘지를 관리할 수 있

는 인력은 25~64세의 남자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족제도의 상당부분이 남계분위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결혼하여 출가한 여자는 묘지관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출가하지 않은 여자라 할지라도 물리적 노동력이 사용되는 묘지관리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24세 이하 남자의 경우 학업, 군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으로 묘지관리를 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65세 이상 남자노인의 경우 육체적 능력의 저하로 실질적인 묘지관리 수행에서 배제할 수 있다. 25~64세 남자인구의 변화추이를 보면, 2010년 1,477만명에서 2015년 1,508만명, 2020년 1,530만명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50년 997만명으로 2010년에 비해 32.5% 감소하고, 2075년 650만명으로, 2010년 대비 56% 감소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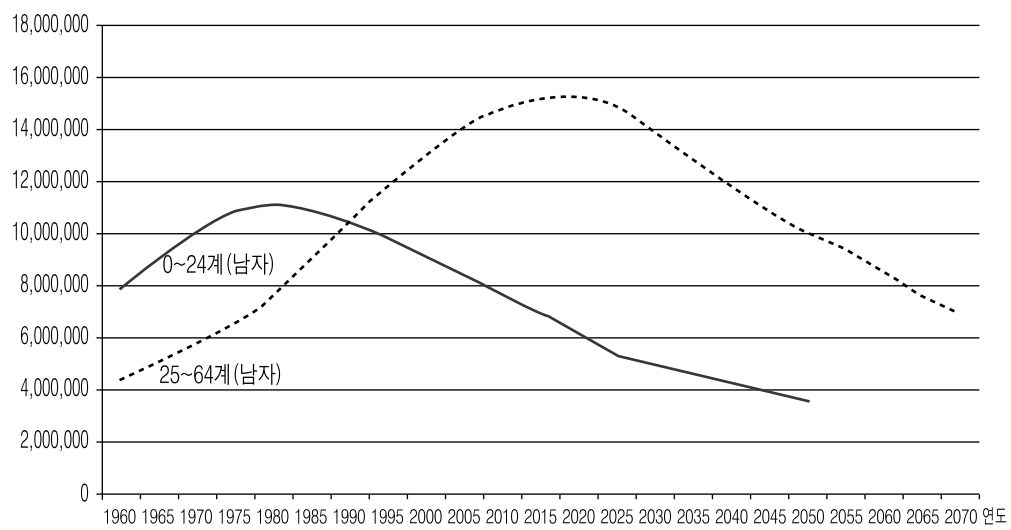
장래 묘지관리 수행의 잠재인력인 0~24세의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1980년 1,11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10년 757만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에는 3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역시 각각 고점대비 31.9%,

67.3%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성인이 된 이후 묘지관리를 담당할 예정인 잠재인력(0~24세)의 감소는 미래 묘지관리의 곤란성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인구의 증가는 분묘의 관리주체인 개인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묘지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래에 관리해야 할 관리대상묘지의 증가를 초래한다. 해방이후 인구의 급증에 따라 현재의 개별가계 내 묘지관리인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의 인구감소는 묘지관리 인력의 감소를 가져와, 인구급증시대에 발생한 분묘까지 관리하게 되므로 묘지관리의 어려움 정도가 가중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림 4. 묘지관리 인력 변화추이(1960~2070년)

(단위: 명)



주: 2055~2070년까지의 25~64세 인력변화는 2050년까지의 각세별 추계인구를 사망자수 감안없이 각세별 이동하는 것으로 설정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령별(전국) 추계인구

2) 가계의 변천과 묘지관리 곤란

(2) 법적·현실적 친족 및 가족의 범위

(1) 일반부부의 남아출생아수

장래의 가계별 묘지관리 곤란정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묘지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남아출생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인 부부가 평균 몇 명의 남자를 출생하는지 살펴보려면 합계출산율과 출생성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식은 ‘합계출산율 × [출생성비/(100+출생성비)]<sup>1)</sup>’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남아출생아수를 계산하면, 1960년 3.08명에서 급감하여 1980년 1.11명, 2005년 0.5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가계내에서의 구체적 남아출생아수가 아니라 가입여성의 남아출생아수이므로 가계내에서의 남아출생아수 변화와는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결혼가구 내에서의 남아출생에 관한 개괄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가족법을 다루는 민법은 제777조와 제779조에서 친족 및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친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77조는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관계로 규정하여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을 미치도록 하고 있다(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또한 가족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 7명은 친족을 4촌이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 추석도 대부분(응답자의 86.4%) 4촌이내의 친척끼리 모여 지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세법과 상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친척’의 범

표 8. 합계출산율 및 출생성비에 따른 남아 출생아수

(단위: 명)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합계출산율	6.0	5.63	4.01	2.84	2.14	1.60	1.72	1.51	1.26	1.13
출생성비(0~4세)	105.27	107.23	106.77	107.44	107.28	108.03	111.20	113.40	110.21	108.06
남아출생아수(0~4세)	3.08	2.91	2.07	1.47	1.11	0.83	0.91	0.80	0.66	0.59
여아출생아수(0~4세)	2.92	2.72	1.94	1.37	1.03	0.77	0.81	0.71	0.60	0.54

주: 비혼가구 출생에 관하여는 수치가 미미하므로 무시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1) 여아출생아수는 합계출산율 × (100 / (출생성비 + 100))으로 표현

위를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척을 도와줄 여력이 없거나 4촌이내까지만 도와주겠다고 응답하여 각종 법령상의 친족의 범위와 실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족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합뉴스 보도자료, 2010.09.20).

종·문중묘지를 제외한 개인·가족묘지의 관리는 가까운 친족 내지 가족내에서 이뤄지므로 묘지관리와 관련한 친족의 범위는 법적 개념이 아닌 현실적 개념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개별가계마다 그리고 세대마다 친족의 개념에 편차가 있을 것이므로 후행적인 법과 선행적인 현실을 모두 감안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실적인 친족의 범위는 좁게는 4촌, 넓게는 6촌까지라고 봐야 한다. 즉, 조부모를 기준으로 손자녀까지 4촌이고, 증조부모를 기준으로 증손자녀까지 6촌이므로 이 범위를 넘어서는 즉 고조할아버지 5대를 넘어서는 경우 친족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 측면에서 무리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는 초핵가족화, 가족해체, 도시이동 등으로 인해 혈족간의 왕래가 빈번하지 않고 친족관계의 결속력이 과거 대가족제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가계 및 가족의 묘지관리인력의 변천 전망

보다 구체적으로 가계의 변천과정에서 묘지관리인력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내

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 가상가계도를 예로 들어 접근해 보기로 한다. 현시점에서 가계내의 묘지관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베이비붐세대 및 그 이후세대 즉, 1955~1970년생 형제자매로 구성된 가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세대의 묘지관리인력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1세대를 시대적 특성을 감안하여 25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평균결혼연령의 상승추세를 감안하여 30년을 1세대로 보고 가계도를 그리도록 한다. 아직까지 가계도는 남자후손 본위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봉제사나 별초 등 묘지관리는 남자중심으로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출생아가 여자인 경우 가계도에서 일단 배제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이러한 가정에 의할 경우 1세대 1955~1970년, 2세대 1985~2000년, 3세대 2015~2030년, 4세대 2045~2070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세대는 1955~63년까지의 714만명에 이르는 1차베이비붐세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구구조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1930~1945년생인 부모를 두고 있으며(이들의 부모세대는 평균결혼연령을 감안하여 25년으로 하며, 2010년 현재 80~65세이다), 이 시기에는 합계출산율 6.0~5.82명이며, 인구구조상 최대인구수가 분포해 있다. 또한 이때에는 가계내의 평균남아수가 3.00명(최저 2.91명, 최대 3.08명), 평균여아수 2.82명(최저 2.72, 최대 2.92명)이다. 따라서 이 가계는 2010년 현재 55~44세의 연령을 지닌 3명의 남자가 가계를 잇고 분묘관리를 수행한다. 2세대는 1세대의 에코세대로서 합계출산율 1.72~1.26명인 시기에 태어났으며, 남아출생아수는 0.85명(0.80~0.91명), 평균여아수 0.76명

(0.71~0.81명)이다. 또한 이들은 2세 손으로서 남자형제가 없으며, 동향렬간 4촌인 남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25~10세의 연령을 지니고 있으며, 분묘관리수행에는 부적합한 연령대에 해당한다. 3세대는 에코세대의 자녀들로서 합계 출산율 1.18~1.26명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태어난다. 출생성비는 1965~2005년까지의 평균성비인 108.49명을 적용할 경우 일반가구의 남아 출생아는 0.63명(0.61~0.65명)이다. 4세대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성비를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나, 양자 모두 추세급변없이 유지된다고 보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를 가족 및 가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를 이어 내려오는 가족별 남아출생아수는

55~70년에 1세대의 경우 3.00명의 남자형제가 출생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녀세대인 2세대는 남자형제 없이 0.85명의 독자상태에 머무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녀없이 여자녀로만 구성된 가족도 등장하여 그 비율이 15%에 이른다. 손자녀세대인 3세대는 더욱 악화된 국면으로 흐르게 되는데 역시 남자형제 없이 0.54명의 독자상태를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이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결국 이때에 이르면 가족내에서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남자구성원이 사라지는 가족이 46%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증손자녀 세대인 4세대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누적 남아출생아수가 0.34명에 불과하고, 분묘관리를

표 9. 가족 및 가계전체 연계 출생아수(비율누적)

(단위: 명)

구분	1세대 (55~70년생)	2세대 (85~00년생)	3세대 (15~30년생)	4세대 (45~70년생)
평균합계출산율	5.82	1.61	1.22	1.22
평균출생성비 <sup>1)</sup>	106.25	110.88	108.49	108.49
평균남아/여아출생아수(일반)	3.00 / 2.82	0.85 / 0.76	0.63 / 0.59	0.63 / 0.59
가족별 남아출생아수(세대연계) <sup>2)3)</sup>	3.00명 (2.91~3.08)	0.85명 (0.78~0.93)	0.54명 (0.48~0.61)	0.34명 (0.30~0.39)
가계전체 남아출생아수(세대연계)	3.00명 (2.91~3.08)	2.54명 (2.34~2.79)	1.61명 (1.44~1.83)	1.02명 (0.91~1.16)
가계전체 관리분묘수 <sup>4)</sup>	1쌍 2기	4쌍 8기	6.54쌍 13.07기	8.15쌍 16.30기
가계전체 1인당 관리분묘수	0.67기	3.15기	8.11기	15.92기
가계내 촌수	2촌(형제)	4촌	6촌	8촌

주: 1) 2015년 이후의 평균출생성비는 1965~2005년까지의 출생성비를 평균함.  
 2) 가족당 평균출생아수는 가족계보상 남아출생아수를 누적적으로 반영한 수치임. 누적이라 함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성비가 세대를 달리하며 부모세대의 남아출생비율이 자녀세대의 남아출생비율에 누적됨을 의미함.  
 3) 남아출생아수는 해당세대에서 출생한 형제자매수를 의미하며, 해당세대가 출생한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4) 베이비부모 주변세대의 부모를 제외한 윗대 조상의 분묘는 관리대상 분묘수에서 제외함.

행할 수 없는 가족이 66%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전체의 남아출생아수는 1세대의 경우 한 부모 아래에서 3.00명의 남자형제를 갖고 있으나, 2세대의 경우 3명의 부모 아래에서 2.54명의 4촌지간의 남자형제를 갖게 되며, 3세대의 경우 2.54명의 부모아래에서 1.61명의 6촌지간의 남자형제를 갖게 된다. 그리고 4세대의 경우 1.61명의 부모아래에서 불과 1.02명의 8촌지간의 남자형제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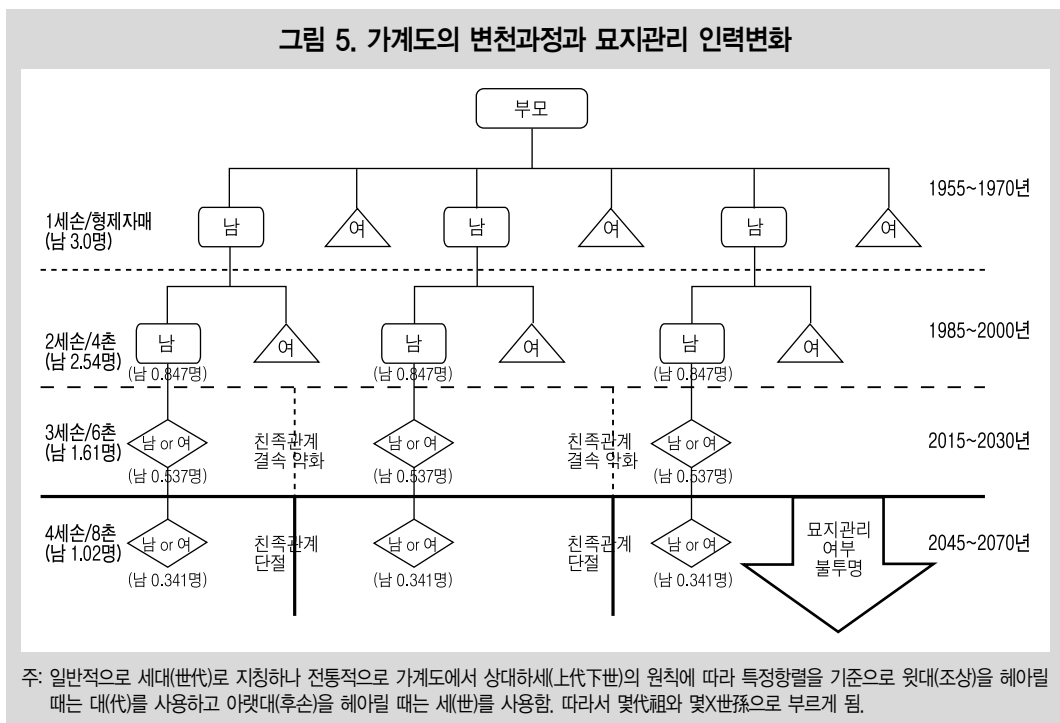
가계전체내에서 조상의 분묘관리에 관해서 2세대까지는 4촌간 2.54명의 남자형제를 갖게 되므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3세대는 친족관계가 멀어지는 6촌지간 1.61명의 남자형제를 갖게 되어 분묘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4세대는 8촌지간 남자형제가 없이 홀로 분묘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관리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추정된다.

세대별로 관리를 해야 할 분묘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묘지관리의 어려움이 더 잘 드러난다. 가계마다 고유의 장사문화가 존재하므로 매장문화가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가계는 매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 매장한다고 가정할 경우, 1세대는 3명의 인원으로 부모인 1쌍 2기의 분묘를 관리하게 되며, 2세대는 2.54명의 인원으로 부모, 조부모를 합하여 4쌍 8기의 분묘를 관리한다. 또한 3세대는 1.61명의 인원으로 증조부모까지 총 6.54쌍 13.07기의 분묘를 관리해야 하고, 4세대

그림 5. 가계도의 변천과정과 묘지관리 인력변화



는 1.02명의 인원으로 8.15쌍 16.30기의 분묘를 관리해야 한다. 이를 각 세대별 1인당 관리대상 분묘수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아랫세대로 내려 갈수록 1세대 0.67기, 2세대 3.15기, 3세대 8.11기, 4세대 15.92기로 폭증하게 된다.

손자녀세대(3세대)는 1.61명이 관리인력으로 존재하지만 이들은 6촌지간으로서 친족관계의 결속력이 매우 약화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실질적인 분묘관리 주체로서 활동하는 2045년 이후는 일반가계내에서의 묘지관리가 매우 어렵게 되고 관리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기되는 묘지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증손자녀 세대는 더욱 상황이 악화된다. 증손자녀세대(4세대) 1.02명의 자손은 2075년부터 고조부모까지 8.15쌍, 16.3기의 분묘를 혼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며, 가계내에 2명의 남자자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8촌지간으로서 친족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상태로서 조상의 묘지관리에 협력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개인분묘는 풍수상 명당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어 특정장소에 집단적으로 설치되기보다는 여러군데 흩어져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러한 상황까지 반영한다면 1.02명의 자손이 16.3기의 분묘를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4. 분묘관리정책 대응

우리나라 산야에는 2천만기 내외의 분묘가

산재해 있고 현시점에서 계속 설치되고 있다. 2045년이후부터는 가계내 자손의 감소로 인하여 묘지관리여부가 불투명해지고 2075년부터는 묘지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흐를 것으로 추정된다.

묘지관리의 곤란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의 묘지문제는 개별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 개인이 모두 합심하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개별가계내 묘지관리인력의 급감으로 인해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분묘가 급증할 때 처리야 할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상상 이상으로 클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성장기 이후 대거 설치된 석물의 처리문제는 비용 외적인 환경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칫 시기적 대응이 늦어 국가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전에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1) 집단장지 분위의 정책 추구

장래 묘지관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은 개인묘지 위주의 장사정책에서 집단묘지, 집단자연장지 등 집단장지 분위의 장사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등 공설장지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신규장사수요를 흡수해야 하며, 개별가계내에서도 신규분묘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기존분묘까지 한 곳에 모아 집단화하여 집약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설장지의 확충은 남비현상 등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개

인분묘의 집단화는 분묘에 손을 대는 것을 금지하는 경향 때문에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냥 대응없이 방치한다면 미래세대에 모든 짐을 떠맡기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가족 묘지의 관리주체가 사라지기 전에 국가는 적극적 홍보교육 수단을 이용하여 개별가계가 당면할 분묘관리의 곤란성과 역부족 상황을 알리고 개별 가계에서 미리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묘지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지의 집단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가야 한다.

## 2) 기존묘지의 자연장지로의 적극적 활용

봉안묘나 봉안당도 묘지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공동시설인 봉안당은 고가의 봉안료와 관리비 부담의 문제와 함께, 추모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후손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처리방법을 강구해야 하므로 관리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또한 개인시설인 봉안묘의 경우에도 후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 묘지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안게 되고, 게다가 과다석물로 인해 일반분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결국 유지관리비도 저렴하고 매장시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 자연장이 최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인데, 이는 분골을 땅속에 묻는 유형이므로 집약적인 안치가 가능하고,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더라도 방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자연장지의 대폭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충분한 집단장지의 확보가 당장 해결하기 어렵고, 봉안시설도 대안이 될 수 없다면 또다른 현실적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안의 하나가 이미 설치된 기존분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될 것이며, 곧 매장과 자연장의 절충적 방법이다. 즉, 조상의 분묘에 손을 대기 싫어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한다면, 조상의 분묘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조상의 분묘가 터잡고 있는 묘지에 후손을 자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자연장시 1위당 안치면적은 0.25㎡(50cm×50cm)면 충분하므로 기존묘지의 부대면적에 많은 수의 자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경우 후손들은 특정 조상을 둘러싸고 순차적으로 자연장할 수 있고 관리하게 될 묘지면적이 대폭 축소될 것이므로 묘지관리의 어려움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즉 시한부매장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많은 묘지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개장 후 자연장함으로써 임야에 흩어져 있는 기존분묘들을 대거 정리할 수 있을 것이며, 관리가 매우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분묘를 활용하여 자연장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 장사법은 매장과 자연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나, 매장과 자연장은 시신을 묻는 것과 분골을 묻는 것으로 대상은 달리하나, 묻는 방식은 동일하므로 '기존묘지의 자연장지화'라는 절충적 대안을 허용하여 향후의 분묘관리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묘지를 활용하여 자연장할 경우 이는 자연장지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여 법적용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고, 시한부 매장제의 적용을 받는 분묘라 하더라도 분묘주변에 조상 또는 후손을 자연장할 경우 자연장한 안치위수 만큼 매장시한을 대폭연장해 주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매장문화와 현대적인 화장문화의 융합적 방식이며, 장사문화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 5. 결론

미래세대로 내려갈수록 초저출산현상, 남아선호사상의 퇴조, 거주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초핵가족화, 가족해체, 친족간 결속력 약화 등 가족관계 변화에 따라 분묘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별 남아출생아수는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는 3.00명이지만, 자녀세대는 0.85명, 손자녀세대는 0.54명, 증손자녀세대는 0.34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를 합산한 가계전체 남아출생아수는 자녀세대 2.54명, 손자녀세대 1.61명, 증손자녀세대 1.02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그리고 가계내에서 각 세대별로 관리해야 할 분묘수가 베이비부머 주변세대는 0.67기에 불과하지만, 자녀세대 3.15기, 손자녀세대 8.11기, 증손자녀세대 15.92기 등으로 폭증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는 베이비부머 주변세대의 조부모세대 이상의 조상분

묘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개별가계내에서의 분묘관리의 곤란성은 더욱 심각해지고 관리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 개인 모두 합심하여 장래의 묘지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는 집단장지 본위의 정책추구로 전환하고 적극적 교육홍보와 함께 충분한 공설장지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남비현상을 포기하고 장사문제 해결에 협력해야 하며, 개별가계는 향후 당면할 관리의 곤란성을 감안하여 미리 가계가 관리하고 있는 분묘의 집단화를 실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기존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할 있도록 장사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조상을 추모하고 사후에도 효를 다하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관리되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경우, 효를 다하기 위한 행위가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는 상황으로 흐를 수 있으며, 이는 머지않아 나타날 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입장에서도 미래상황을 염두에 두고 분묘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가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고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문**